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 지회
2023년도 제1차 정책 포럼 자료집



- 일시 : 2023. 04. 28(금) 16:00-18:00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GNU 컨벤션 센터 404-1호실

I	행사 개요
----------	--------------

1 포럼 일시 2023년 4월 28일(금), 16:00~18:00

2 포럼 목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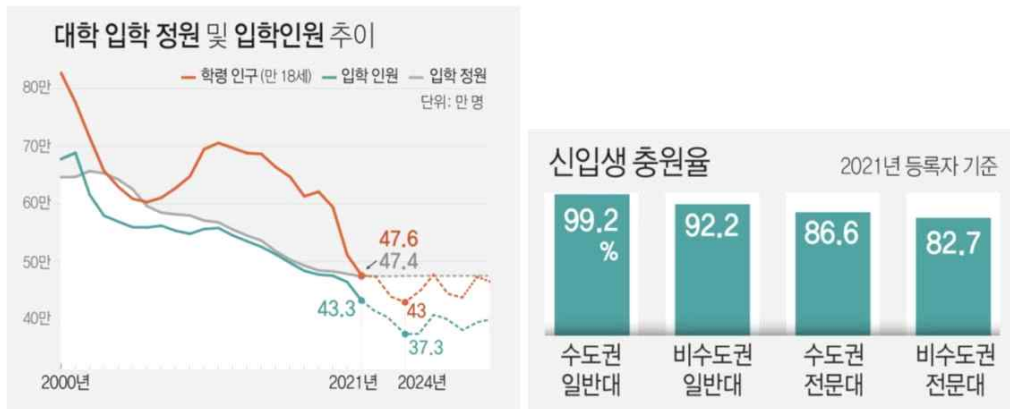
3 장 소 GNU 컨벤션센터 404-1호실

4 세부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5:30 ~ 16:00	접 수
16:00 ~ 16:10	개회사
	인사말 및 축사
16:10 ~ 16:40	주제 발표1: 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 대학정책과 전국 국립대학 위기 최인철 교수(경북대학교)
16:40 ~ 17:10	주제 발표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원칙과 방향 남중웅(한국교통대학교)
17:10 ~ 17:20	휴식
17:20 ~ 18:00	질의 및 토론
18:00~	만찬

발표 1. 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 대학정책과 전국 국립대학 위기
최인철 교수(경북대학교)

대학의 위기: 학령인구 감소



과연 학령인구의 감소는 필연적 위기인가?

- 학령인구 감소
 - 1971년 이후 출생률의 감소는 지속되었다.
 - 재학생 수의 감소 역시 40년간 지속 되었다.
- 초·중등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왜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나?
 - 무상교육
 - 교육의 질 향상의 기회
- 초·중등의 기회, 고등교육의 위기(?)

왜 위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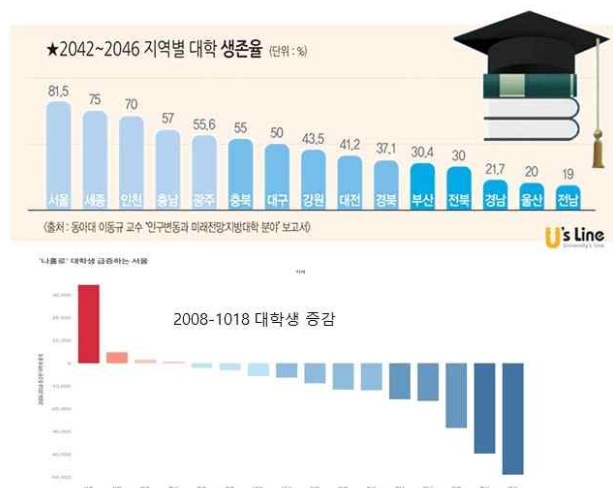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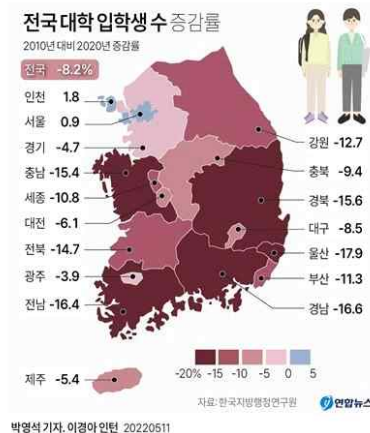
• 미흡한 고등교육 투자

구분	한국	OECD 평균	EU 평균	최상위국
초등교육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USD)	12,535	9,550	9,601	21,143
중등교육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USD)	14,978	11,192	11,404	25,412
고등교육(R&D 포함)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USD)	11,290	17,065	16,986	47,694
고등교육(R&D 제외)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USD)	8,882	11,653	11,088	29,969

자료: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프랑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1.4	1.6	2.5	2.3	2	1.4	1.5
공공재원	0.9	0.6	0.9	1.2	0.5	0.4	1.1
민간재원	0.4	0.9	1.6	1.1	1.4	0.9	0.3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17,065	11,290	34,036	24,496	29,911	19,309	17,420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액	11,297	4,482	12,253	12,738	7,477	6,179	13,413

지방대학의 위기, 국립대학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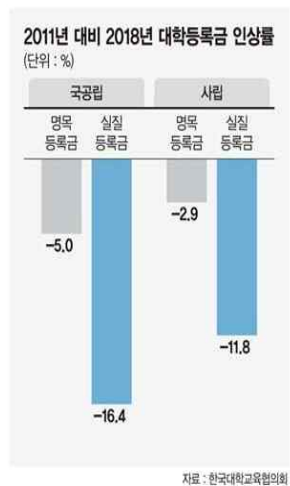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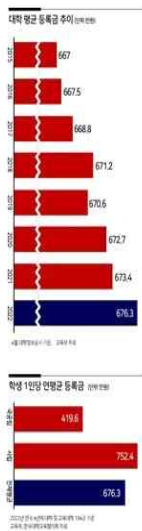


국립대학의 위기: 대학원생 감소

2020 대학원 진학률

순위	학교명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1	서울대학교	3,166	991	31%
2	연세대학교	4,156	801	19%
3	고려대학교	4,427	745	17%
4	이화여자대학교	3,293	545	17%
5	한양대학교	3,511	516	15%
6	성균관대학교	4,114	509	12%
7	부산대학교	4,379	468	11%
8	경희대학교	5,462	557	10%
9	충남대학교	3,976	400	10%
10	중앙대학교	5,222	478	9%
11	경북대학교	5,182	481	9%
12	전북대학교	4,121	378	9%
13	인하대학교	3,657	342	9%
14	건국대학교	3,399	295	9%
15	충북대학교	3,310	308	9%
16	경상대학교	3,273	261	8%

국립대학의 위기: 재정 위기



국립대학의 위기: 재정 위기

- 반값 등록금 실시 이후 국공립 대학의 재정지원은 양적으로 늘어난 것 처럼 보이나 경상비를 제외하고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함.
-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 재정은 악화 되었음.

<표 II-5>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준 국·공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회계 연도	총 재정지원액 (A)	경상비 제외 후 재정지원액 (B)	국가장학금 (C)	국가장학금 비율 (C)/(B)*100	기관 대상 재정지원액 (D)=(B)-(C)	기관 대상 지원액 비율 (D)/(A)*100
2011	42,510	15,853	1,482	9.4	14,371	35.1
2017	50,014	20,735	6,148	29.7	14,586	29.2
2018	51,071	20,828	6,037	29.0	14,791	29.0

자료: 서명인 외(2020), p.133. 참조 후 재구성함.

국립대학의 위기: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

- 등록금을 통한 수입의 증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답보 상태를 유지
-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재정지원의 안정성이 없음
 - 고등교육재정의 총량이 해마다 크게 바뀌고 그 집행의 원칙도 변동성이 큼.
 - 그나마 재정 지원도 각종 지표, 구조개혁 등을 전제로 하는 경쟁수주 방식임.
 - 안정적 재원이 아닌 돈은 결국 의미 없는 사업들의 집행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큼.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필요

국립대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 위기는 국립대학의 학문적 수준 하락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022년 QS 세계대학순위

순위	대학명	논문 피인용
29	서울대	70.3
73	연세대	28.4
99	성균관대	37.8
157	한양대	17.6
346	이화여대	9.1
392	중앙대	8.6
410	한국외대	1.6
457	서강대	6.3
481	동국대	7.6

순위	대학명	논문 피인용
510	경북대	14.7
550	전북대	10.8
600	부산대	13.6
750	전남대	14.3
750	충남대	9.1

국립대학의 위기: 제도적 미비

- 법령체계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규정
 - 국립대학의 운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부재
 - 대학의 의사결정권이 총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총장의 교무통할권)
 -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등교육법 제6조).
 - 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국립학교 설치령 제5. 2)
 - 국립대학의 설치근거가 되는 국립학교 설치령은 대통령령이며, 이는 국립대학을 영조물로 보는 것에 따른 것임.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그 지위를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의 제정이 필요함.

대학 구조조정: 손쉬운 국립대 중심

- 노무현 정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 정원감축: 7만1천명(-10.9%)
 - 지방: 6만명(-14%); 수도권 1만명(-4.8%)
- 이명박 정부: 하위대학 퇴출 시스템(전문대>사립대학, 지방대학)
 - 4년제 대학: 2천명 감소; 전문대 3만4천명 감소
 - 지방: 지방(-7.6%); 수도권(-3.7%)
- 박근혜정부: 1주기 구조개혁 평가(2015)
 - 4년제 대학: 2만9천명 감소; 전문대 3만2천명 감소
 - 지방(-13.6%); 수도권(-7%)
- 문재인 정부: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자율개선)
 - 정원감축: 1만2천명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따른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현실화
 - 사학 재단의 필요에 따른 대학 운영 재편 가능
 - 인기학과 위주로의 학문 재편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
 -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 가중
 - 지역 대학의 몰락 가속화
 - 기초학문의 기반 붕괴
 -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

라이즈사업

- 라이즈 사업
 - 지역사회, 지역경제와 동반성장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를 지역주도로 전환
 - 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
 - 시도의 대학지원 전담부서(교육부 파견 협력관)
 - 혁신적 거버넌스 구축?
 - 예) 국립대학의 시립, 도립화?
 -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
- 문제점
 -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거시적 플랜이 없는 무개념 사업
 -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책임회피
 - 실질적 고등교육예산 증액 없는 일시적 예산(+1.7조)은 고등교육의 지자체 떠넘기기
 - 대학의 정치와 행정 하부기구화 위험성
 -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 몰락 가능성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부의 개정 이유
 -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상위법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개정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학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임.

지방의 위기

순위	학교명	졸업자	취업자	제외자	취업률(%)
1	성균관 대학교	4,114	2,470	399	77.0
2	한양대학교	3,511	2,007	262	73.4
3	인하대학교	3,657	2,291	106	71.4
4	고려대학교	4,427	2,385	288	70.3
5	연세대학교	4,156	2,198	218	70.1
5	서울대학교	3,166	1,458	94	70.1
7	경희대학교	5,462	3,096	369	68.3
8	국민대학교	3,132	1,827	190	67.0
20	충남대학교	3,976	2,116	126	61.3
21	중앙대학교	5,222	2,969	269	59.9
22	부산대학교	4,379	2,231	168	59.6
23	공주대학교	3,295	1,790	80	59.1
24	강원대학교	4,520	2,456	103	57.9
24	조선대학교	4,401	2,336	138	57.9
26	동아대학교	4,415	2,398	82	57.7
27	충북대학교	3,310	1,626	176	57.5
28	계명대학교	5,010	2,590	239	57.2
29	경북대학교	5,182	2,574	167	56.8
30	대구대학교	4,278	2,261	111	56.5
31	전남대학교	4,358	2,349	173	56.1
32	부경대학교	3,694	1,884	90	55.9
33	영남대학교	5,008	2,527	139	55.0
34	전북대학교	4,121	1,987	109	54.7
35	경상대학교	3,273	1,547	72	52.6

■ 수도권 대학 대비 지방대학 졸업생 연봉 비율



2020년 지역별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 현황 (단위: 만원)



무엇을 할 것인가?

• 국가교육위원회의 한계점

-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무성, 공적기금의 안정적 지원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과 교육부의 정책 독점 방지, 정책 일관성, 사회적 합의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 대학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기관의 필요성
-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 위주의 내용과 구성으로 조직되었음.

•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안정적 재정지원의 계획 수립, 사립과 국립의 정책 조정, 학문·학제간 장기 정책 조정

무엇을 할 것인가?: 고등교육교부금법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 입 9.74조원	세 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분야 0.05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③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 고등교육 재정난의 급한 상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시법이 아닌 좀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 국가 교육 예산의 전반적 확대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 전용은 단기적 착시 효과만 불러오고 궁극적으로는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제로섬 게임만을 불러 일으킴.
- 고등교육의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법이 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등교육위원회 신설



- 우려
 - 국가의 고등교육 포기(?)
 - 지자체 고등교육에 대한 장악력 증가와 대학 자율성의 위기
 - 고등교육의 합리적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 부재
- 대안
 -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구로만 국한
-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컨트롤 타워 필요: 고등교육위원회

비수도권 주민 절반 "우리 지역 소멸할 것"...경북·전북 최악

전경련, 지역경제 인식 조사...41.1% "수도권 이주 희망" [(뉴스1) 이형진 기자 | 2023-04-11]

지방민의 49.4%는 거주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중 64.0%는 2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6개 시도(△경북 66.7% △전북 64.8% △울산 60.0% △전남 58.5% △강원 54.2% △대구 50.9%)에서는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8개 시도(△부산 48.6% △제주 45.5% △대전 44.4% △충북 43.1% △경남 42.5% △충남 41.3% △광주 37.7% △세종 20.0%)에서는 지역소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다.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64.4%) △30대(41.7%) △40대(39.2%) △50대(36.1%) △60대 이상(28.3%) 순으로, 수도권 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60대 이상보다 약 2.3배 높았다.

< 지역소멸 가능성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비수도권 주민 절반 "우리 지역 소멸할 것"...경북·전북 최악

전경련, 지역경제 인식 조사...41.1% "수도권 이주 희망" [(뉴스1) 이형진 기자 | 2023-04-11]

지방민의 49.4%는 거주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중 64.0%는 2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6개 시도(△경북 66.7% △전북 64.8% △울산 60.0% △전남 58.5% △강원 54.2% △대구 50.9%)에서는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8개 시도(△부산 48.6% △제주 45.5% △대전 44.4% △충북 43.1% △경남 42.5% △충남 41.3% △광주 37.7% △세종 20.0%)에서는 지역소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다.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64.4%) △30대(41.7%) △40대(39.2%) △50대(36.1%) △60대 이상(28.3%) 순으로, 수도권 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60대 이상보다 약 2.3배 높았다.

< 작년 대비 올해 지역경제 수준 >



< 지역별 전년대비 올해 지역채감경기 수준 >



* 주: 작년 지역경제를 100이라 할 때, 올해의 지역경제 수준(100미만 악화, 100초과 개선)

< 지역소멸 가능성 >



< 지역소멸 예상시점 >



비수도권 주민 절반 "우리 지역 소멸할 것"...경북·전북 최악

전경련, 지역경제 인식 조사...41.1% "수도권 이주 희망" **[(뉴스1) 이형진 기자 | 2023-04-11]**

<작년 대비 올해 지역경제 수준>

<지역별 전년대비 올해 지역채감경기 수준>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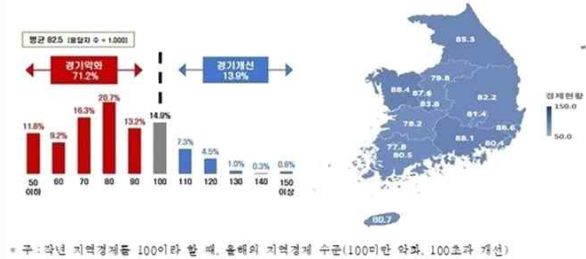
- △ 열악한 일자리 여건(47.4%)을 가장 많이 꼽았고,
- △문화·휴식시설의 부족(20.9%)
-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미흡(20.4%) 등이다.

지방민들은 지역경제 위축의 원인으로

- △지역산업 위축(27.0%)
- △지역소비 부진(26.1%)
- △지역재정 악화(16.6%)를 꼽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 △지역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53.5%)
- △생활 인프라 구축(19.3%) 등을 지적했다.



* 구: 작년 지역경제를 100이라 할 때, 올해의 지역경제 수준(100이란 것과, 100초과 계산)

<지역소멸 가능성>



<지역소멸 예상시점>



대한민국 인구현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2023년 2월 22일 자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투입 예산>

- 1차 기본계획 기간(2006-2010): 19조8926억원(2006년 2조1445억원 투입)
- 2차 기본계획 기간(2011~2015): 60조5789조원(1차 보다 3배 투입)
- 3차 기본 계획기간(2016~2020): 152조8658억원이 투입

2021년 1년 동안만 46조6846억원이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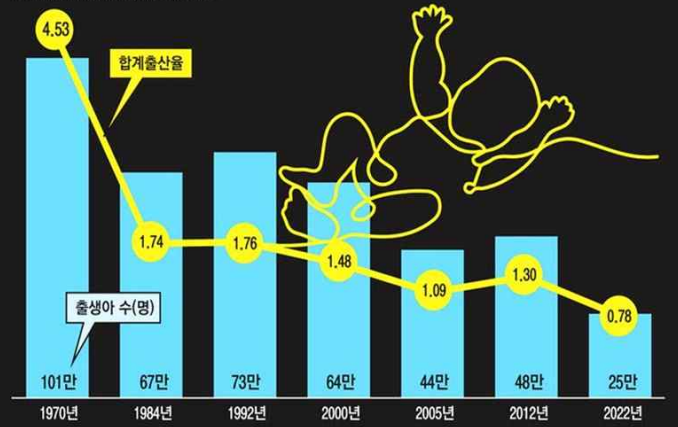
2006년부터 15년간: 총280조원 예산 투입

효과:

-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
- 합계출산율**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
- 2022년 지난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으로 하락**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가임 여성 1명당 명, 자료: 통계청



출산을 저하의 문제

-대학의 서열화와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각성은 지역 불균형으로 지방대학 위기로 이어져 지역소멸과 국가위기로 봉착된다.

-심각한 취업난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으로 정주여건이 어렵다

-결혼이 부담스럽다. 결혼을 하더라도.....

-돌봄, 육아, 사교육비,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 등으로 출산이 두려운 세상이다.

→ 출산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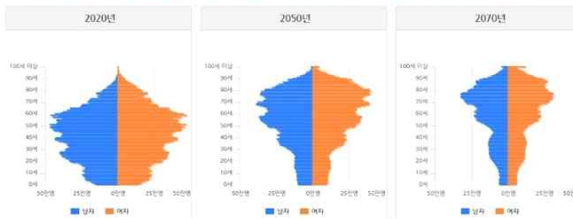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학생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4.4% 감소
-1982년~2021년 5월 기준 40년간 초·중등학교 폐교 3855개교
(전국 1만1943개교/32.3%폐교/지방소재 폐교 94%)

지방 대학 미달-폐교 속출, 지방 생태계 붕괴, 지방 소멸

-2018년 강릉지역 인구의 13.2%가 대학생,
-대학생 1인당 1달 평균 소비지출액 56.6만원 (연평균 58.4만원)
-연간 총지출액 1,600억원(강릉 대형소매점 매출 52.4% 수준)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자 이자 공급자 역할(한국은행 자료)



합계출산율 추이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원형민 기자 20230222

자료: 통계청
YONHAPNEWS

대한민국 대학의 현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
2022년 현재 대학교 수 413개교(대학 223개교, 전문대 145, 대학원대학 45개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등교육현상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표방으로
상호약탈식 재정지원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 생존을 건 무한 경쟁인 **‘밀림의 세계’**이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공고 제2023-118호(2023.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5. 10. [진행]

3. 주요내용(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위헌)

라. 통·폐합 관련 규정 보완(안 제24조 신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위임하고자 함.**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에 어긋나고, 상위 법 규정이나 근거규정이 없어 ‘시행령 통치’로 위헌 소지가 많다.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이를 국회에서 ‘국립대학법’ 재정으로 구체화하여 이를 개정하여야 하며, 이 시행령을 무효화 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필요).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규칙)이 법률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국교조 자료)

대학의 자율성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 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 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시설의 관리 및 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에 미친다고 보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의 위법성(국교조 자료)

대통령령의 위임명령은 대통령이 헌법 제75조 전단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을 말하고 있다.

헌법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전문기술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유로 국회가 스스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본적인 목적·요건·내용만을 국회가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입법이 대통령령으로서 위임명령이다. 대통령이 위임명령의 발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의 집행명령은 헌법 제75조 후단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입법의 실재를 보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없어도 대통령은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집행명령에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의 위법성(국교조 자료)

「국립학교설치령」은 「고등교육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명칭과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통·폐합에 대한 내용을 제24조에 신설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 제9조에 국립학교 설립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국립대학교 통·폐합의 경우에도 법률로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의 위법성(국교조 자료)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국립대학교 통·폐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운영·관리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또한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국립학교 설치령」에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국립대학교 통·폐합에 대한 법률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립학교 설치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이 기초,보호 학문과 학과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연구와 교육 등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의 규정이 요구된다.

국립대학 제도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

제정 지원 등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부 역할의 **한계 및 책임회피에 대한 과제**

1. 국립대 사용자를 교육부에서 정부로 법 개정(교육부는 사용자로서의 한계 / 인혁처-기재부 협조 안됨)
2. 우선 국립대학법 제정(무상교육실시)
3. 국립대학의 자율성·민주성 강화(학장임명제 폐지, 총장 교무총괄권 폐지 등)
4. 대학교원 처우 개선(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교직·연구수당 지급, 교연비 개선 등)
5.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재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 예산의 기획-집행-평가자가 동일인)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를 재검토 하라고요? 교수님의 서명으로 국립대학을 지켜주십시오!

“국립대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 사립대와의 불균형을 줄이고 ...”. “국립대 지원금 일부를 빼서 사립대에 장학금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전 KDI 부원장이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국립대의 존재 이유도 재검토하라고 합니다. KDI가 어떤 곳입니까? 이주호가 재직하던 곳 아닙니까?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은 결국 국립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손 떼기 수순입니다.

국립대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공공성의 상징이자 보루입니다. 현재 2천여 명의 교수·연구자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1만 명 교수님들의 서명으로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과 국립대학을 지키기 위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십시오.

10년 전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통폐합, 총장직선제 폐지 추진하던 이주호의 귀환?

그의 긴말에

- “지방대학의 굉장히 담대한 구조개혁”,
- “가장 과감한 변화”, “자기희생의 충분한 감수”,
- “특히 국립대의 시립화, 도립화” 등

우리는 기가 막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대학신문

대한민국 핵심 고등교육정책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개혁?,,,,,,,,,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
-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글로벌 대학육성사업」



디지털 타임스 김세희기자 20230109

대한민국 핵심 고등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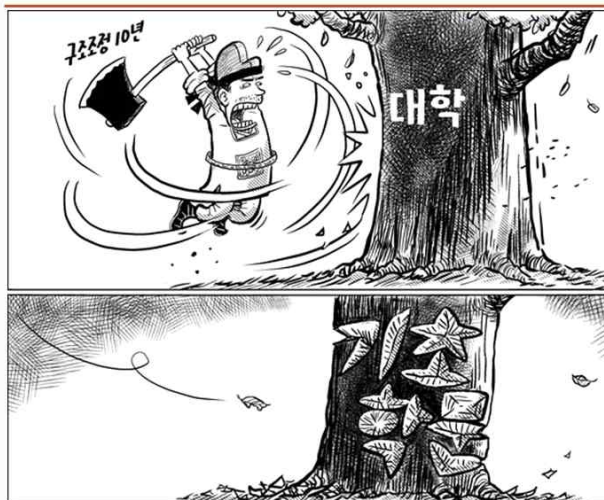
[한겨레]

- 공적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
-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 및 책임을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지방대학의 굉장히 담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일부 지방대에 지원을 몰아주어
살아남는 대학만 살리겠다는:
「글로벌 대학육성사업」



한겨레 심창식 편집위원

대한민국 핵심 고등교육정책



<한국대학신문>



교수신문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

- 교육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학 규제 완화책은 "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 " 으로 규정한다.
- 교육·연구 주체인 교수는 피해를 보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소유주 등에게만 유리하다는 관점이다.**
- "(4대 요건: 교지·교사·교수·수익용 기본재산)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이다.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다.
- 대학설립과 운영의 4대 기준 대폭 완화**: 많은 사학은 기준을 채우고 남는 **유휴 자산을 자유롭게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매각해 교육과 연구가 아니라 법인과 사학 소유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고,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 통폐합도 강행 할 것임.
- 전체 교원의 5분의 1인 현행 겸임·초빙교원 비율을, 3분의 1 까지로 완화.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교수 양산**
- 학과 신설, 폐지 등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
- 공적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악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이양 및 책임 전가
- 기존 주요지역대학 육성사업 5개**(RIS, LINC 3.0, LIFE, 고등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통합+타부처 재정지원사업 포함 해서 RISE로 전환**(분주하기만 하지 과거와 유사하며-구조조정 만 요구)
- 평가지표:대학역량진단평가지표**를 연상 시킨다.(지역대학 출신 졸업생이 지역내 산업체로 취업 시 유리한 정량 평가가 산출되도록 구성)-지역 대학활성화 인지-지역내 산업 활성화인지 혼란스럽다.
- 한국 산업구조(열악한 지역 산업구조): 전체산업체 50.7%가 수도권 집중, 사업체 매출액 58.1%가 수도권 사업체에서 나온다.(범정부와 지자체가 양질의 기업유지 혁신 방안 추진이 우선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 이후, 그 다음 대학의 혁신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 지자체가 교육부를 대신해 재정지원사업으로 구조조정 등 대학혁신 요구 할 것임
- 지자체-대학간 친소관계에 따라 불공정성 대두

「글로벌 대학육성사업」

-「글로벌 대학 육성 계획」: 지방대학의 굉장히 담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일부 지방대에 지원을 몰아주어 살아남는 대학만 살리겠다는 것.

-대학입학 가능 인원 2021년 43만명-2040년 28만명으로 줄어 듦
(2021년 수도권+지방국립대 입학정원 약 26만명) 글로벌 미 선정 지방대학은 존립의 귀로

-라이즈+글로벌:「산업과의 연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라이즈 목적: 지자체·대학·지역산업 연계=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 만 생존 가능

-라이즈+글로벌:산업수요 중심의 대학 육성 강조=>학문 다양성의 훼손과 기초학문 연구 기능 고사가 우려 됨

-라이즈+글로벌: 대학의 공공성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여겨짐.

-대학을 지자체와 산업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굴욕

-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학과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

-수도권 대학, 상위권대학 및 인기학과 쏠림현상으로 지방대학은 위기를 맞을 것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정령」-「RISE」-「글로벌 대학육성사업」

- 1)정당정치의 이념의 대립이 격렬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장의 중립성이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 2)신자유주의나 시장경제논리는 보호학문-인문-예체능 같은 기초학문-학과의 보호와 유지가 어렵다.
- 3)제도적 고등교육재정 확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없이 일회용(착시현상/한시적/땜빵식) 재정지원은 눈속임이다.
- 4)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에 고등교육재정 지원 매칭 협조는 처음부터 어려운 정책이다.
- 5)중앙정부의 공공적 고등교육 손 떼기다.
- 6)지방자치단체에 설거지나 하라는 책임전가로 여겨집니다.

윤석렬정부의 고등교육정책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정령
- 「RISE」
- 「글로벌 대학육성사업」

-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완화와 기준 철폐로 사학법인과 소유주에게 퍼주기,
- 고·등평생교육특별 회계로 순간 대학 달래기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갈라치기와 생색내기
- 고등교육 당사자들과의 공론화와 협의를 무시,
- 지방 국립대의 시립화, 도립화 시도,
- 공교육 생태계 왜곡과 파괴
- 지방대학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한국대학신문+

「윤석렬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엇박자 고등교육정책」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각종 발언에서 나타난 지방대학의 육성이란 것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는 급조-부실-업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 윤석렬 대통령이 부러짓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창조적인 선도국가”라는 것은 이주호 장관이 급조하는 남의 나라 대학 한물간 정책을 흉내만 내면서 그냥 폭주하는 고등교육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 미래 지속 가능성이 부재한, 10년 전 재탕 정책으로 하다가 아니면 그만인 것이고, 이를 위하여 친위적 각종위원회를 통한 합리화와, 시범 모델 찾기로 책임의 전가와 회피로만 비취 집니다.
- 결국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며, 학문 균형의 파괴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

- 우리 대학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공공적 책무가 요구되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지방대의 발전적 존재는 지방소멸을 막는 지방의 큰 버팀목이 된다.
- 따라서 전 국민적 공감대는 지역균형발전, 특히 지방의 소멸을 막는 것이다.
- **결국 지방대학 살리는 것이 답이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고등교육체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7개 교수단체 참여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의(민교협),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제24조 신설] 철회
- ▲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 철회
- ▲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및 글로벌 대학육성사업' 중단
- ▲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준수
- ▲ OECD 평균 이상의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 ▲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을 위한 제도 정비
- ▲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교육주체 당사자들과 '민주적 공론화' 요구
- ▲ '국립대학법' 재정할 것 등을 요구

'교육부'는 계속 하겠다. -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철회 및 중단 하라!

교수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2023년 2월 1일, 국회 소통관)



교수연대회의 1,056명 시국선언(2023년 2월 8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지방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교수들의 처우를 도리어 악화시킨다, “윤석열 정부의 저급한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교수 시국선언 ” 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역사상 최초로

국·사립대를 막론한 교수 단체들이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단일 대학 정책**’을 주제로 1,056명이 서명한 공동 선언을 시국선언문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교수연대회의 1,056명 시국선언(2023년 2월 8일)



교수연대회의 국회 토론회(2023년 2월 8일)



교수연대회의 투쟁선포 기자회견(2023년 2월 13일)



교수연대회의 교육부 앞 기자회견(2023년 3월 22일)



교수연대회의의 1만명 서명운동 돌입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주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파행적 고등교육정책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상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이에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정책 철회 및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수·연구자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수연대회의의 1만명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2023년 3월 23일)



교수연대회의의 1만명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2023년 3월 23일)



교수연대회의의 1만명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2023년 3월 23일)



[illegible][illegible]

교수연대회의 대구·경북 토론회(2023년 3월 17일)



교수연대회의 충청지역 토론회(2023년 3월 30일)



교수연대회의 강원지역 토론회(2023년 3월 31일)



교수연대회의 부·울·경지역 토론회(2023년 4월 11일)



교수연대회의 현수막



교수연대회의 1인 시위(국회-교육부)



교수연대회의 1인 피켓시위(국회-교육부)



교수·연구자 연대하여 행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폭주를 막아

- 졸속행정 고등교육 정책 전국교수·연구자 '1만 서명'으로 대응하자!
- 국립대학 통폐합 세부적 사항을 교육부에게 위임하여, 대학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안)」을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하여 막아내자!
- 교육부 관료주의와 사학비리 척결하여 '대학자치' 쟁취하자!
- 학문균형 발전으로 '우리학문' 발전 시키자!
- 교수·연구자의 자율적 혁신과 고등교육재정 확보로 '교육혁명'이룩하자!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감시다!

붙임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개 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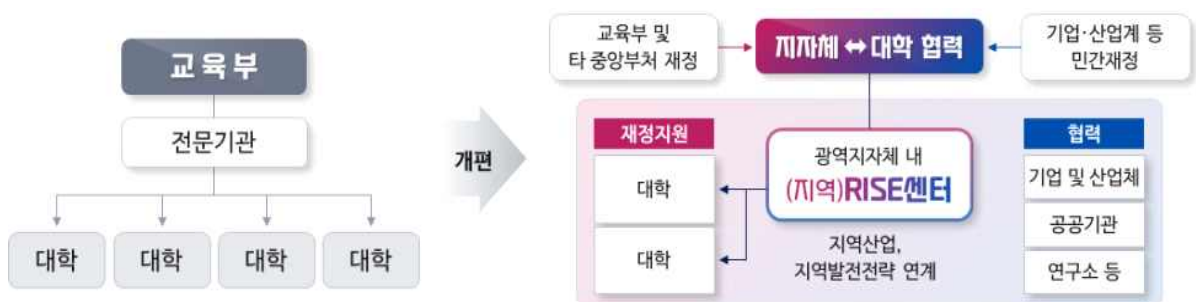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재정지원사업 연계 및 지자체 참여 강화
- '25년부터 5개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
-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Ⅰ



- (지역주도 대학지원) 시·도 지정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 지원,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 후 대학재정 지원



- (대학지원 추진체계)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을 통해 지역의 대학지원 기반조성
- ('25년 전 지역 시행) '23년 5개 내외 시범지역 운영*, '24년 기반조성을 거쳐 '25년 전 지역 RISE 시행 추진

*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지원한 RISE계획 마련 및 실행 등

[MEMO]

--